

# NEWS

2025년 4월 1일 화요일

## 해저 송전선로 규제 풀려 해상풍력 '순풍'

### ▶1면 '트럼프궤 관세'서 계속

이미 25% 고관세로 납품 단가가 크게 뛰면서 예정된 수출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업체들도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다 3일로 예정된 자동차 관세 부과와 상회관세까지 현실화 되면 자동차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 철강 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시는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 중에서 대미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전 및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선제 대응과 종합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내 상공회의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KOTRA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연구원, 전남TP 등 경제 관련 유관기관과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대응 전담팀(TF)'을 운영해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에 물론 지역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지역 산업 위기를 최소화하도록 TF를 중심으로 수출구조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 할 수 있는 일을 신속하고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1면 '무등산 탐방객'서 계속

평균 여행 비용을 보면 치악산(21만 2173원), 오대산(21만1527원), 북한산(20만4868원), 무등산(20만570원) 순으로 나타났다. 월출산 16만5523원, 지리산 15만9446원, 다도해해상 15만687원 등이었다.

무등산의 경우 여행회비 3만4457원, 숙박비 6만3636원, 식음료비 3만2734원, 교통비 2만5200원, 쇼핑비 2만9514원, 기타 비용 1만5028원으로 조사됐다.

동반 유형을 보면 무등산은 친구·동료·연인과 함께 찾은 비율(35.2%)이 가장 높았다. 가족 48.4%, 혼자 12.0%, 동호회·산악회 4.2%였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임산부, 은둔청년을 위한 탐방서비스를 도입했고, 선제적으로 친환경화장실 신축, 노후시설 보수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 섬~섬·섬~육지 2km 이내 공중 전선로 연결 가능

### 정부, 전남도 건의 수용...사업비·공기 단축 기대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해저에 설치해야 했던 송전선로 규제가 풀리면서 비용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돼 해상풍력 확대에 순풍이 불게 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건의에 따라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공중에 설치한 전선로) 설치도 가능하도록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경우 습지 보호구역에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점

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원이 소요되지만, 가공선로 구축 시 비용은 140억원으로 3000억원을 절감하고 시공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전남도는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협상을 방문해 해저 송전선로는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도 많이 들며, 근해지역의 짧은 거리는 오히려 매설 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훼손이 심하다는 점을 설명해 시행령 개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편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와 기술자문에 도움을 줬다.

또 '단거리 갯벌구내 내 가공선로 횡단

시 환경영향 검토 용역'을 통해 해저 송전선로와 가공 송전선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단거리 구간인 경우 해저 송전선로보다 가공선로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전남도는 2월 3.2GW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에 공단 평가를 통과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집적화단지 발전사업의 송전선로 경로 결정 협조와 공감을 얻어냈다. 한편 해상풍력사업처, 광주전남건설지사에서도 현장설명회와 기술자문에 도움을 줬다.

또 '단거리 갯벌구내 내 가공선로 횡단

작성성 협의의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늘리는 두 건의 규제를 제거하기도 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해준 환경단체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한전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며 "갯벌과 조류 등 생태계에 가해지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도록 한전,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 NH농협 'NH더든든밥심에움기' 1호 가입 기념 행사에서 우리 쌀 소비 장려와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 정책을 위해 NH농협은행에서 출시된 'NH더든든밥심에움기' 상품에 광역자치단체장 1호로 가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김나운 "도시철도 2호선 침단대교 재검토"

### 유일한 지상 구간...교통 불편 등에 지하로 변경 촉구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유일한 지상 구간인 침단대교 부분을 지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나운 광주시의원(민주당·북구6·사진)은 3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 침단대교 통과 구간은 도시철도가 교량 상부를 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방식이다"며 "이로 인한 교통 체증 등으로 주변 교통 불편 초래 및 교량 안전 문제 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단대교 위를 통과하는 도시철도는 철길 옆으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침단대교 주변의 교통 체계를 변경해야만 한다"며 "짧은 거리를 멀리 우회하는 변경은 교통 체증을 야기하고 시민 불편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상 구간이었던 광신대교도 노후 교량의 안전성 이유로 지하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예산 문제로 유일하게 지상 구간으로 남은 침단대교도 1997년 준공 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차량과 철도가 함께 교량

상부를 통행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량의 최초 설계와 달리 침단대교 상부로 도시철도가 통행하게 되면 하중이 증가하는 만큼 교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며 "침단 3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면 차량 통행량은 더 증가할 예정이라 시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나운 의원은 "지하화를 위해서는 400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돼 총사업비 협의 및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적 제한 요인이 많아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침단대교는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이 통과하는 최고등급 교량으로 경전철인 2호선이 통행하더라도 안전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현재 사무처장 "尹 탄핵심판 사건 신중 검토"

### 평의 한달 넘겨 최장기록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을 더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현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현재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

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인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현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울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는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빠르면 4월 1~2일 중 선고일을 발표한 뒤 3~4일째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전남도, 주요 사찰 산불 대비 집중 예찰

전남도는 최근 전국 대형 산불로 사찰과 국가유산이 소실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재난 발생 시 국가유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예찰을 했다. ▶관련기사 5·15면

주요 사찰을 포함해 국가유산을 보유한 106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찰 내 소화전 등 소화설비 점검, 동산문화유산 보호 계획 점검, 산불 재난 발생 시 위험 요소 등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저우로 173 네영빌딩 3층 (상무저우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